

09

농식품·산림·해양

■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부기등기(附記登記) 시행

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실 (☎ 044-201-1382)

■ 농업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.

- '15년 6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의 등기서류에 **보조금 지원 사실 및 제한사항***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* **제한사항** :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(통상 건축, 토지는 10년 / 기계, 장비는 5년) 동안 목적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 및 담보 제공 등과 같은 재산처분이 제한

■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보조목적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 및 담보제공 등 **재산처분** 할 경우에는 **중앙행정기관 장의 승인**이 필요하나,

- **보조사업자가** 이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, 매수자·금융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**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***하였습니다.

* 전남지역 민간보조시설 907개 중 88개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담보제공 되거나 제3자에게 매매(감사원 감사결과, '13. 9.)

■ 부기등기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**승인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을 처분하는 비정상적 사례가 사전에 방지될**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시행

- 추진배경 : 보조금이 지원된 재산의 임의 담보제공 등 재산처분 사례 방지
 - 주요내용
 -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건축물 등 재산의 등기서류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 및 제한사항을 기재
- (기재예시) 동 재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것으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보조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양도, 교환, 대여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.
- 시행일 : 2015년 6월(잠정, '14.12.9 국회 본회의 통과)

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 등 경영활동 강화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☎ 044-201-1537)

-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법인 운영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합니다.
- 먼저, **농어촌 관광휴양사업**은 영농조합법인만 가능했지만 농업회사법인도 관광휴양 단지사업, 관광농원사업, 주말농원사업이 가능해집니다.
-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법인채무에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하였으나, 201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출자액한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여 부담을 낮췄습니다.
- 또한, 영농조합법인은 그간 **합명·합자회사** 형태인 농업회사법인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**유한·주식회사**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- 영농조합법人间 합병·분할의 근거와 절차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정보광장>법령정보>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'14.12 공포, '15.6 시행 예정)

농업법인 제도 개선

■ 추진배경 : 농업법인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여 투자유치 및 경영 활성화

■ 주요내용

- ①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 확대(농업경영, 가공·유통 등 →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포함)
- ②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범위 조정(무한연대 책임 → 출자액 한도)
- ③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 조직변경 유형 확대(합명·합자회사만 가능 → 합명·합자·유한·주식회사 가능)
- ④ 영농조합법인 간 합병·분할 가능

■ 시행일 : 2015년 6월



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

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(☎ 044-201-1554)

■ '15년부터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비,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」를 시행합니다.

- 슬레이트 지붕 교체, 단열 강화 등 주택 개량과 상·하수도 설치, 진입로 확장, 옹벽 보강 및 빈집 철거 등 생활·위생·안전 인프라 개선을 집중 지원하는 동 사업은,
-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'15.3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- 3~4년간 최대 70억원(국비 기준)이 지원되는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지역발전위원회 홈페이지>지역위소식>보도자료>“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, 내년도 예산으로 구체화”

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

■ 추진배경 :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

■ 주요내용

- ① 생활·위생 인프라 : 상·하수도 설치, 빈집정비, 골목정비 등
- ② 안전확보 : 재해예방시설 설치, 소방도로 확장, 노후시설 보수 등
- ③ 주택개량 : 슬레이트 지붕 개량, 벽체·창호 단열 등

■ 시행일 : '15년 3월(사업대상지 선정)

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보험(안전·화재)가입 지원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(☎ 044-201-1592)

■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체험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농촌체험휴양마을은 가족·학교 등 다양한 체험객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나, 보험료 부담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약 50%만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.
- 2015년부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안전·화재 보험 가입 자기부담 비율을 축소(보험료의 50%→20%)하여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고,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농촌관광 포털(www.welchon.com)>사업소개>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

2015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: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사고 대응력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마을의 안전·화재 보험료 자부담 축소(50%→20%)
- 시행일 : 2015년 3월



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(☎ 044-201-1574)

-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.
 - 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8,250원에서 40,95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-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

2015년도 농어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: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기준소득금액을 상향 조정(85만원→91만원)
 - *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 확대(38,250원→40,950원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‘농업경영위험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수입(收入) 보장보험이 도입됩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(☎ 044-201-1780)

- 농산물 가격하락·수확량 감소로 인한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**양파, 콩, 포도** 3개 품목에 대해 **농업수입(收入)보장보험**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.
- 농업수입보장보험은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‘13~‘14년 도상연습*(11품목, 1,500농가)결과, 도입 타당성이 높은 **양파, 콩, 포도**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.
 - * 수입보장보험 도상연습은 보험계약자에 대해 금전의 수수 없이 가입, 손해평가, 보험금 산출 등을 실시하는 가상의 정책수행 방식
 -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, 보험가입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감소(양파 22%, 포도 27%)하여 경영안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

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(양파, 콩, 포도) 도입

- 추진배경 : 농업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영위험에 대비
- 주요내용 :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실시(양파, 콩, 포도)
 - ※ 지급보험금 = 보장수입(과거 기준수입 × 보장률) - 실제수입
 - ① 기준수입 : 개별농가의 과거 평년수확량과 과거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곱
 - ② 실제수입 : 개별농가의 실제수확량과 시장가격의 곱
 - ③ 보장률 : 가입자가 보장수준을 고려하여 60~80% 수준에서 선택
- 시행일 : 2015년 6월(보험 판매개시)



밭직불금 확대로 농가 소득안정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(☎ 044-201-1778)

- '12년~'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 - 위의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25만원/ha의 밭농업고정직불금이 지급됩니다.
 - 한편, 공부상 지목이 '밭'인 농지에 26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40만원/ha*의 밭농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.
 - * 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/ha 포함
 - 또한, 겨울철에 식량·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 논에 대해서는 '14년보다 10만원 인상된 50만원/ha을 지급합니다.
- 한편, 본인이 경작하는 논을 겨울철에 식량·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허용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밭농업직접 지불제사업

2015년도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: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
- 주요내용 :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을 밭에 재배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
 - ① 밭고정직불제 도입(모든 밭작물에 대해 25만원/ha 지급)
 - * 다만, 기존 밭농업직불대상인 26개 품목에 대해서는 40만원/ha 지급 (밭농업고정직불금 25만원/ha 포함)
 - ② 겨울철 논 이모작 식량·사료작물 재배시 직불금 인상(40만원/ha→50만원/ha 지급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

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(☎ 044-201-1776)

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/ha 으로 인상합니다.

- '14년 지급단가(90만원/ha)보다 10만원 인상(증 11.1%)됨에 따라 농가는 평균 11만원 (평균 재배면적 1.1ha 기준)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
■ 또한,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(고정, 변동)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됩니다.

- 쌀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▲'12년 이후부터 쌀직불금 등록 직전연도까지의 기간 중 ▲1년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▲1천㎡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'15년도 쌀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* (기존) 2년이상 경작면적 1만㎡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→ (개선) 1년이상 경작면적 1천㎡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
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

2015년도 쌀직불금 지원 확대

■ 추진배경 :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지원

■ 주요내용 :

- ① 쌀 고정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(90만원/ha→100만원/ha)
- ②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(2년이상 경작면적 1만㎡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→1년이상 경작면적 1천㎡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)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



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(☎ 044-201-1756)

-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6개 용자 사업(잔액기준 3.2조원)의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.
- 대상자금 3.2조원에 대한 금리 인하로 매년 약 336억원의 농업인 금융부담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.

* 대출 농가 당 약 20만원의 금융 부담 절감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기대

대상사업	기존금리	변경금리
농기계구입자금	3%	2%
귀농인창업지원자금	3%	2%
긴급경영안정자금	3%	2%
축산경영종합자금	3%	2%
6차산업창업지원자금	3%	2%
농업경영회생자금 *	3%	1%

- 적용대상은 '15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입니다.

*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됨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

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

■ 추진배경 :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

■ 주요내용

- ① 용자사업 이자율 인하(농기계구입자금 · 귀농인창업지원자금 · 긴급경영안정자금 · 축산 경영종합자금 ·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: 3%→2%, 농업경영회생자금 : 3%→1%)

*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시점부터 적용됨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

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(☎ 044-201-1797)

-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**대상 품목을 늘리고, 보장 범위를 확대**할 계획입니다.
- (대상품목) 2015년부터 **시설무·백합·카네이션**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**46개로 확대**됩니다.
- (보장범위) 과수 5품목에 대해 일부 재해(태풍·우박 등)만 보장하던 방식에서, **모든 자연재해(조수해·화재 포함)를 보장하는 방식(종합위험보장방식)으로 단계적 전환**을 추진합니다.
 - 2015년에는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**사과가 신규로 추가**(3개 시·군)되며, 기존에 적용되던 **배·단감은 사업지역이 확대**(배: 12 → 30, 감: 3 → 12)됩니다.
-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작물재해보험, 보험대상품목 및 종합위험 보장방식 확대

2015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
- 추진배경 : 현장 수요에 부응한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대상품목 확대(43 품목 → 46품목)
 - ② 보장범위 확대
 - 종합위험보장방식 전환('14:배·단감 → '15:배·단감·사과)
 - 사업지역 확대 : 배(12개 시군 → 30), 단감(3 → 12), 사과(신규 3)
- 시행일 : 2015년 2월



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(☎ 044-201-1738)

- '1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매매 지원단가가 3만원/3.3㎡ 에서 3.5만원/3.3㎡으로 인상됩니다.
- 그 동안 농지가격 상승률을 고려한 것으로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이 줄어들고, 영농 규모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향후 농지 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> 농지규모화사업

2015년도 농지규모화사업의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

- 추진배경 : 전업농의 농지매입 부담 완화 및 영농규모화를 촉진
- 주요내용
 - ①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(3만원/3.3㎡→ 3.5만원/3.3㎡)
-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

쌀 관세화 시행
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(☎ 044-201-1822)

- 2015년 1월 1일부터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**쌀도 관세화(tariffication)** 됩니다.
 - * 관세화란 수입물량제한 등 관세 이외의 수입제한 조치를 없애고 이를 국내·외 가격차이로 계산한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지금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쌀을 수입할 수 있었으나, 이제는 **정해진 관세(513%)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** 됩니다.
 - 지난 20년동안 관세화 유예 대가로 의무적으로 저율관세(5%)로 수입했던 물량 408,700톤은 **5%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**되며 국내 시장에 미치는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.
 - 만약 쌀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**추가 관세를 부과(특별긴급관세, SSG)**하여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입니다.
- 또한,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**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**합니다.
- 참고로, 정부는 WTO 농업협정에 근거하여 쌀 관세율을 513%로 적용하고 수입 급증시 추가 관세를 부과(특별긴급관세, SSG) 할 수 있도록 **양허표 수정안을 WTO에 통보(9.30)** 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주요정보 바로가기>쌀 관세화 유예종료(특별 홈페이지)

쌀 관세화 시행

- 추진배경 : WTO농업협정 이행 및 국내 쌀 생산기반 보호
- 주요내용
 - ① 관세화 시행(의무수입물량 5% 관세→의무수입물량 5% 관세 및 수입쌀 513% 관세)
-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

국산쌀-수입쌀 혼합 유통·판매 금지 실시
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(☎ 044-201-1815, 1820)

- 2015년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·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·판매가 금지됩니다.
 - 금번 혼합금지 조치로 쌀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가 확립됩니다.
 - * 혼합 금지 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·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,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며,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도 지급
 - 또한, 양곡의 거짓·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‘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에서 ‘3년 이하 징역,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’으로 강화됩니다.
 - 금번 조치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, 앞으로 정부는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.
-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-수입쌀 혼합 유통·판매 금지 실시

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·판매 금지

- 추진배경 : 쌀 부정유통 방지 및 유통거래 질서 확립
- 주요내용
 - ①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·판매 금지
 - ②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·판매 금지
 - ③ 처벌규정 강화(1년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 → 3년이하 징역,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)
-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■ 아시아매미나방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(☎ 044-201-2074)

- 2015년에는 아시아매미나방에 대한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기존 20%에서 25%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해운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선박 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폭을 20%에서 '15년(1년간) 25%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 - 인하 대상항목은 기본수수료, 할증수수료, 재검사수수료 등 모든 검사항목입니다.
- ☞ (참고)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홈페이지>정부3.0정보공개>사전공표대상정보>이사회 개최 결과>제9차 임시이사회 결과 의안번호 제2014-17호

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 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 배경 및 내용

- 추진배경 : 해운경기 불황으로 인한 선박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- 주요내용
 - ① 선박검사 수수료 한시적 인하폭 확대(20% → 25% 인하)
 - ② 인하항목 : 기본수수료, 할증수수료, 재검사수수료
- 시행일 : 2015년 1월1일



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(☎ 044-201-2317)

■ 소·돼지·닭·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대상을 2015년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.

-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2013년 2월 23일부터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였으며,
 -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축사면적에 따라 연도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.
-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·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* 다만,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
☞ (참고) 농식품부 홈페이지>정보광장>법령정보>축산법 시행령

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준전업규모 농가로 확대

■ 추진배경 :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

■ 주요내용

축종	전업규모 초과	준전업규모	소규모		
소	600㎡ 초과	600~300㎡	300~50㎡	50~15㎡	15㎡미만
돼지	1,000㎡ 초과	1,000~500㎡	500~50㎡	50~15㎡	15㎡미만
닭	1,400㎡ 초과	1,400~950㎡	950~50㎡	50~15㎡	15㎡미만
오리	1,300㎡ 초과	1,300~800㎡	800~50㎡	50~15㎡	15㎡미만

* 축사면적

계 획	허 가	등 록		등록 (소· 돼지)
		허가(계획) / 시행일		
		'15.2.23일~'16.2.22일	'16.2.23일~	미등록 (닭· 오리)

* 축사면적 50㎡이하 농가는 가축사육업 “등록” 필요(닭·오리의 경우 15㎡미만은 미등록)

■ 시행일 : 2015년 2월 23일



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(☎ 044-201-2362)

- 국내산 돼지고기의 위생·안전성을 위해 돼지·돼지고기이력제가 전면 실시됩니다.
- 돼지 질병 등 위생·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.
 - 돼지 사육시설 마다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.
- 또한, 돼지고기의 원산지, 사육자, 도축장,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·관리되어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돼지고기이력제

2015년도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

- 추진배경 : 돼지 및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정보 기록·관리를 통해 방역의 효율성 도모 및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사육단계 : 돼지 사육농가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
 - ② 유통단계 : 농장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이력번호 발급 및 기록·관리
 - ③ 소비단계 : 스마트폰 앱, 인터넷을 통해 돼지고기 이력정보 조회 가능
- 시행일 : 2014년 12월 28일("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")

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장 설치 신규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(☎ 044-201-2332)

-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「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」은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,
 - 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-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, 2015년에는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,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원(보조 3억원, 융자 3억원)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>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

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지원 실시

- 추진배경 :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
- 주요내용
 - ① 지원대상 : 한우, 육우,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협 비회원조합 등(농·축협은 제외)
 - ② 지원내용 : 직거래 판매장 등 신축 및 임대료(융자금 활용), 냉장·냉동창고, 진열장, 인테리어시설, 음식조리시설, 기타 부대시설 등
 - ③ 지원조건 : 보조, 30%, 융자 30%(금리 3%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), 자부담 40%
 - ④ 지원한도 : 개소당 최대 6억원(보조 3억원, 융자 3억원)
 - ⑤ 2015년 지원규모 : 20개소 (60억원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을 육계로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(☎ 044-201-2383)

- 보다 **쾌적한 환경**에서 **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**하여 육계를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증하는 '**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**'가 시행됩니다.
 - 지금까지 산란계와 돼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하였으나 2015년부터 육계로 확대하여 **계란, 돼지고기**에 이어 **닭고기**에도 '**동물복지 인증마크**'가 표시됩니다.
 - 사육기간과 용도에 따라 육계, 토종닭, 삼계로 구분하여 인증
 - '**동물복지 인증마크**'는 '동물복지 축산농장'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, '동물복지 지정 운송차량'을 통해 운송, '동물복지 지정 도축장'에서 도축되어 생산된 축산물에만 표시할 수 있어 **사육부터 도축까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가 적용**되었음을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.
- ☞(참고) 농식품부 홈페이지 > 정보광장>법령정보>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

2015년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: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대상 축종 연차별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대상 축종 확대(산란계, 돼지→육계 추가)
- 시행일 : 2014년 12월 15일

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(☎ 044-201-2375)

■ 범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대책('13.2월) 발표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(이하 가축분뇨법) 하위법령 개정('15.3월)으로 무허가축사를 적법 축사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('13.5.31)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, 가축양육실 추가,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습니다.

- 또한, 가축분뇨법 개정('14.3.24)으로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, 폐쇄·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~4년 유예하였습니다.

- '15.3월,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,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입니다.

- 또한,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'14년7월부터 '15년1월까지 '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'을 위한 연구'를 하고 있으며,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 > 알림소식 > 보도자료 > 무허가축사 개선대책

☞ (참고)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 > 정보광장 > 법령정보 >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☞ (참고) 농식품부 홈페이지(www.mafra.go.kr) > 정보광장 > 입법예고 >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추진

■ 추진배경 : 무허가 축사 개선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

■ 주요내용

- ① 무허가축사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(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,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한우 추가,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등)

■ 시행일 : 2015년 3월

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(☎ 044-201-2377)

-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방역대, 이동통제, 살처분, 초소 등 방역조치 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
- AI 발생으로 방역대 내(500m 또는 3km 이내)의 가금농가에 대해 전부 이동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였으나,
 - '15년부터는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, 방역대 내 발생·신고 시기, 축종, 역학관계,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,
 - 방역대 내에서 이동통제중인 가금 및 알에 대해서도 AI 검사 등 안전성 확인 후 출하를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- 또한 발생지역 및 방역관리지구 중심으로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, 축산차량만 탐지 및 선별 소독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식품부,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 ('14.8.14)

AI 방역조치사항 변경 주요 추진내용

- 추진배경 : AI 방역조치로 인한 국가재정부담 완화 및 국민불편 최소화
- 주요내용
 - ① AI 발생 시 방역대 내 가금에 대해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 실시
 - ② AI 발생지역 내 거점소독시설 운영하여 축산차량 선별 소독
- 시행일 : 2014년 12월(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)



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(☎ 044-201-2359)

- 구제역 청정화 획득 및 유지를 위하여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 50두 미만 사육 농가)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구제역 발생시 엄청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농가의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,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상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소규모·고령 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구제역 백신의 자체 접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, **접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해 우려**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백신 접종 실효성 향상을 통한 **구제역 청정화**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, 2015년부터는 구제역 재발방지 및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**백신접종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**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

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

- 추진배경 : 전국 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세 소규모 축산농가 등은 자체 접종 어려움을 호소
- 주요내용
 - ① 소(한육우, 젖소)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
 - * 지원형태 : 국고보조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완화

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(☎ 044-201-2157)

-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.
-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에서 40퍼센트 이상으로 낮출 계획입니다.
 - 지정요건은 총 매출 규모 및 식재료 구매액에서 외식업소의 수를 기준으로 변경됩니다.
- * (종전) 해당 지구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⇒ (변경) 해당 지구 내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
- 또한, 5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 등에 지회를 가지도록 한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을 폐지합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

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

- 추진배경 :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외식업 지구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지정요건 완화(외식산업 총 매출 규모가 4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식재료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→ 외식업소의 수가 20개소 이상일 것)
 - ① 외식산업 사업자 단체의 인가 요건(5개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 등에 지회 확보) 폐지
- 시행일 : 2015년 1월

교육-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양성

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(☎ 044-201-2118)

■ 새로운 트렌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 기업의 매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취업준비생, 경력단절 여성,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취업 및 창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습니다.

- 신 식품 트렌드 직업의 취·창업교육(3개 과정 예정*)
- NCS(국가직무능력표준)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
- 대학생 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

* 푸드 셰라피스트, 식품 무역통상, 식품제조기술

- 또한,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식품기업의 원활한 구인구직을 도모 하고 교육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으로 인력양성 교육의 질을 향상 하도록 하겠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

교육-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확대로 식품인력 양성

- 추진배경 : 식품산업 교육과 취업을 위한 식품기업 매칭 확대로 식품인력 양성

■ 주요내용

- ① 교육인프라구축(식품교육 수요조사·분석, 교육프로그램 협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 공모 및 보급, 식품기업 구인·구직 정보시스템 구축)
- ② 교육프로그램 운영(신직업 창업교육 및 NCS기반 대기업 교육프로그램, 대학생·수출형 중소기업 연수프로그램, 사이버 프로그램 개발 운영)

- 시행일 : 2015년 2월(잠정, 신규 사업 구축 중)

對 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 지원

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팀 (☎ 044-201-2172~7)

- 한-중 FTA를 우리 농식품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.
 - (정보제공) 대한상의·aT·KREI 등을 중심으로 중국 성(省)별·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여 제공합니다.
 - (물류) 수출업체의 물류부담 완화를 위해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공동물류센터(7개소)를 운영·지원합니다.
 - (통관) 중국의 인증·검사전문 국영기업인 CCIC(중국검험인증집단)를 통해 수출자 등록,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90%를 지원합니다.
 - (현지화) aT·Kotra·무역협회·대한상의 등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농식품 수출기업에 상품화·마케팅·법률자문 등 현지화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.
 - (온라인 진출) 1호점(1号店), 알리바바(1688.com) 등 해외 온라인 채널 입점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 정보 제공, 입점 절차·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,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홍보·판촉 등도 지원합니다.

☞ (참고)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

2015년도 대중국 농식품 수출 지원 항목

- 추진배경 : 한·중 FTA 활용, 대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집중지원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성(省)별·도시별 수출잠재품목을 발굴하고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
 - ② 청도 물류기지와 현지 냉장·냉동 물류센터 이용을 지원
 - ③ 수출자 등록, 중문 라벨 제작등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- ④ 현지화를 위한 상품화·마케팅·법률자문 등 지원
 - ⑤ 온라인 입점 절차·브랜드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
- 시행일 : 2015년 3월



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각화
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(☎ 044-201-2220)

■ 농업관측 모바일앱 및 SNS를 활용, 농업인·유통인·소비자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양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관측정보는 인쇄물과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, '14년 농업 관측정보 모바일앱과 SNS(카카오톡스토리)를 개설하였습니다.
 - (모바일앱)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월보, 속보 등 관측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, 원하실 때 언제든지 농업관측 관련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 - (SNS) 관측정보와 함께 제철농산물·건강 요리법 등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·제공하고 있으며, 관련정보에 대한 의견교환 등이 가능합니다.
- 또한, 관측정보를 정보이용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.

☞ (참고1)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스토어 접속 > 농업관측센터 검색 및 앱 설치

☞ (참고2) 카카오톡스토리 접속 > 친구찾기 > 농업관측센터 > 소식받기

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

- 추진배경 : 농업관측정보 제공방식 다양화로 이용자 소통 강화
- 주요내용
 - ① 제공방식 다양화(인쇄물, 인터넷→모바일앱 및 SNS 추가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전망 대회 개최

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(☎ 044-201-2220)

- **2015년 농업전망**은 농업인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수급조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**권역별로 개최**할 예정입니다.
- 지금까지 농업전망 행사는 서울에서 의전행사 중심으로 개최되어 정책수요자인 농업인·생산자단체의 참석이 저조했습니다.
- 2015년부터는 농업인의 참여도를 높이고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**주산지 중심의 지방대회로 개편**할 계획입니다.
 - 동 행사를 통해 농업인의 새해 **영농계획 수립**에 도움을 주고, 정책 담당자, 학계, 전문가, 생산자·단체간 **소통할 수 있는 기회**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 - 또한, 농업인·생산자단체·유통인 등의 자율적 생산·유통 조절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[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](#) > 관측정보 > 농업관측정보 > 농업전망

2015년 농업전망 권역별 개최

- **추진배경** : 농업인의 참여도 제고와 자율적 수급조절 역할 강화를 위해 권역별로 개최
- **주요내용**
 - ① 품목별 주산지 중심의 지방대회로 농업전망 행사 개편
 - * 중부권(경기), 호남권(전남), 영남권(경북), 충청권(충남), 제주도에서 개최
- **시행일** : 2015년 1월 20일(중부권), 22일(호남권), 27일(영남권), 29일(충청권), 2월 3일(제주도)



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(☎ 044-201-2258)

- 시설원에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 - 2011년부터 지열냉난방시설·목재펠릿난방기를 지원하였으나, 초기 사업비 부담과 지원 대상 제한으로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5년부터 지중열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지중열냉난방시설의 경우 지열냉난방시설 대비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(약 37% 정도 절감 기대) 있어 농가 부담을 완화하게 되고,
 - 폐열 재이용시설은 발전소·소각장 등 폐열의 농업에너지화를 통해 버려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 경영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한편, 에너지절감시설로 지원해 온 공기열냉난방시설 농가 지원기준을 0.1~0.5ha에서 0.1~1.0ha로 조정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 2015년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

2015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지원대상 확대

- 추진배경 :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확대보급 기반 구축
- 주요내용
 - ①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대상 확대(지열냉난방시설, 목재펠릿난방기→지중열냉난방시설, 폐열재이용시설 추가)
 - ②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요건 조정(온실면적 0.1~0.5ha→0.1~1.0ha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농업인 인증 신청 절차 간소화로 GAP 활성화

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(☎ 044-201-2425)

-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GAP(농산물 우수관리)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.
-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GAP 인증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·군 사무소, 시·도 지원, GAP 인증기관 등 3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'14년 10월부터는 인증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에 따라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완화되었으며,
- 인증 구비서류에 '위해요소관리계획서'를 신설,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여 제도를 내실화하였습니다.
- 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농산물 우수 관리(GAP)제도, 인증은 쉬워지고 안전성은 강화

2014년도 GAP 제도개선 주요 내용

- 추진배경 : GAP(농산물 우수관리) 제도개선을 통한 인증 면적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인증절차 간소화(신청절차 3→1차례)
 - ② 인증 소요기간 단축(최대 126→42일)
 - ③ 인증 구비서류 축소(12종→3종)
 - * 단,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신설하여 잔류농약, 미생물, 중금속 등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
- 시행일 : '14.9.30일(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기타 고시 3종 개정)

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으로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 강화

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(☎ 044-201-2419)

■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신규 도입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으나, 2015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합니다.

-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한 형사처벌(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,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)은 그대로 적용하며,
-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·징수합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정보광장>법령정보>현행법령>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('15.6.4. 예정법률)

2015년도 원산지표시제 위반자 처벌강화 내용

- 추진배경 :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근절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
- 주요내용
 -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
- 시행일 : '15년 6월 4일(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개정, '14. 6. 3.)

친환경농업직불금(유기) 3년간 추가 지급으로 유기 인증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
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(☎ 044-201-2440)

■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**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을 개편하여 유기지속직불을 신규 도입**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하였으나, 2015년부터는 동 필지에 대해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.

- 신규 도입되는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현행 유기 지급단가의 50%인 논 300천원/ha, 밭 600천원/ha이며,
- 우선 3년간 지급하고, 향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영구 지급 등 지속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>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>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

2015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 개편 내용

- 추진배경 : 공익적 가치가 높은 유기 재배 실천 농가의 소득 보장 확대
- 주요내용
 - 친환경농업직불금 3년간 추가 지급(유기 5년 → 유기 5년 + 추가 3년*)
* (단가) 논 300천원/ha, 밭 600
- 시행일 : '15년(잠정, 「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」 개정 추진)



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·개방

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구축추진단(☎ 043-719-4064)

- 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「통합식품안전정보망」을 '14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여 '15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그간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고 상호 단절되어 식품안전 문제 발생 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,
-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·운영을 통해 범부처 식품안전정보를 학교급식 등 안전 관리에 활용하여 보다 촘촘한 먹을거리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고, 국민과 산업체는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·개방

- 추진배경 :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따라 부처별로 나누어진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하고 통합하여 부처간 칸막이 없이 활용하고 국민에게 개방

■ 주요내용

- 식약처·안행부·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·통합하여 공유·활용

행정업무통합시스템 (15.4월 운영)	식약처·지자체간 인허가 정보 등을 연계하는 통합 행정 정보시스템 구축
정보공동활용시스템 (15.5월 운영)	부처별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·활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보 통합DB 구축
식품안전정보포털 (15.5월 운영)	전자민원, 상담·신고, 행정정보 등 대국민 맞춤형 종합정보서비스 제공

- 시행일 : 2015년 4월부터 순차적 운영

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(☎ 043-719-2861)

- 기구류의 경우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제조·판매하였으나, 2015년 1월 부터 식품용 기구류는 “식품용” 문구나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식품용 기구에 “식품용”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없어 비식품용 기구를 혼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게 함으로써
 - 식품용으로 제조된 적합한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 구매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에 위해요소가 없는 안전한 기구류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.

*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 제19조 제1항(2013-254호, '13.12.26)

식품용 기구류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

- 추진배경 :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류를 식품용 문구나 마크표시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기구류 선택권 보장
- 주요내용
 - 식품용 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의무화
- 시행일 : 2015. 1. 1.

■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 (☎ 043-719-2003)

- '15년부터 식품 생산·제조업체 현장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됩니다.
- 실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대부분 생산·제조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식품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주로 영업자(대표자)를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습니다.
-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'15년부터 식품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업체에서 식품안전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본 수칙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식품안전교육센터를 통한 기본안전수칙 내재화와 안전의식 제고로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수준이 한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■ 현장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

- 추진배경 : 생산업체 품질관리 담당자의 기본안전수칙 내재화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체계 마련
- 주요내용
 - 식품 생산·제조업체 내 품질관리 담당자에 대한 기본안전수칙 등 교육
 - 교재 등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, 우수업체 현장 견학 등
- 시행일 : 2015. 4월 예정



산림탄소모아(산림탄소등록부) 시스템 운영

산림청 산림정책과 (☎ 042-481-4199)

■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를 위해 ‘산림탄소모아(산림탄소등록부)’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

-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,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신청부터 산림탄소흡수량 거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시스템 구성 : 산림탄소모아 포털, 산림탄소등록부, 온실가스 인벤토리

☞ (참고)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오픈시 접근경로를 별도 공개 예정

산림탄소모아(산림탄소등록부) 시스템 운영

■ 추진배경 :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 활동과 산림탄소흡수량 통계의 투명한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산림탄소모아 시스템 구축

■ 주요내용

-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정보 제공
-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에 관한 통계 제공
- 산림탄소상쇄사업 운영(사업 신청부터 등록, 검·인증, 흡수량 거래까지 일원화)
- 산림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정보 제공 등

■ 시행일 : 2015년 상반기



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규제 개선

산림청 산림정책과 (☎ 042-481-4137)

- 기존 연구개발 참여는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 자격을 제한하여 오던 것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여 상상력·아이디어 발현 기회 및 연구개발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국·공립 연구기관,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·산업대학, 정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으로 연구개발 참여대상을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훈령/예규/고시>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

R&D 참여제한 기준 및 연구비 목적외 사용 처벌 기준 완화

■ 추진배경 : 창조경제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과학기술 규제 발굴 및 개선

■ 주요내용

-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에 관한 제재사유별 상세기준 개선
- 누구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 완화(개선)
- 연구개발비 사용 변경 한도 상향조정 등 집행기준 개선
 - 장비·시설비 변경 승인 한도 : 5백만원 이상 → 3천만원 이상
-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제출기간에 대한 기간 연장
 - 과제종료 후 5년간 제출 : 매년 1월 31일까지 → 매년 2월말까지
-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기술료의 사용 비율 확대
 - 참여연구원의 정부출연금 보상금 지분 : 40%이상 → 50%이상
-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(사용금액 비율) 참여제한 기간 축소
 - 20%이하인 경우 : 5년 이내 → 3년, 20%이상 30% 이하 : 7년 이내 → 4년, 30%초과인 경우 : 10년 이내 → 5년, 둘 이상 병합의 경우 : 10년 이내 → 5년
-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위원 확대
 - 12인 이내, 외부전문가 30% 이상 →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성별 고려,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

■ 시행일 : 2015년 1/4분기

우드그랩 품셈 반영

산림청 목재생산과 (☎ 02-481-4204)

- 숲가꾸기, 직영벌채 등 벌채산물 집재 설계 시 우드그랩 품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.
- 지금까지 우드그랩 집재에 대한 품셈 부재로, 벌채산물 집재 설계는 가선집재로, 실제 집재는 우드그랩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, 2015년 1월부터는 우드그랩 품셈이 마련되어,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경사도 25도 이하인 임지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훈령/예규/고시>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

우드그랩 산물집재 품셈 반영 내역

- 추진배경 : 우드그랩 집재에 대한 품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, 산물수집 설계와 실제 산물집재 상의 모순이 발생
- 주요내용
 - ① 숲가꾸기, 직영벌채 등 산물수집 시 우드그랩 집재에 대한 품셈을 반영
 - *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경사도 25도 이하인 임지에 대해서만 적용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

산림청 목재생산과 (☎ 042-481-4204)

■ 국산목재의 중경재(가슴높이 직경 16~30cm) 생산시기 진입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하여 목재생산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(제재·건조·가공시설 등)을 보다 현대화시설로 개선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통합자료실>2015년도 목재생산 사업계획

2015년도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

■ 추진배경 :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목재생산시설을 현대화 개선

■ 주요내용

- 건조시설, 제재·가공시설, 방부시설 등의 현대화 개선을 지원
 - (제재시설) 띠톱 및 원형톱, A-costa, 자동제재기, 집진설비 등
 - (건조시설) 저온·중온·고온 건조기, 고온고습 건조기, 진공·고주파 건조기 등
 - (가공시설) 스펀들레스, 원주가공기, 프리컷 자동설비, 방부·집성재설비 등
- 지원단가 : 200백만원 / 개소 (국비 100백만원)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



가로수 관리방법 개선

산림청 도시숲경관과 (☎ 042-481-4227)

- 가로수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**가로수의 관리방법을 개선**할 예정입니다.
-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신호등,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현상을 조치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를 위해 강도 가지치기로 **수형을 조절**하고, 과도한 수형조절로 경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**대체 수종으로 교체**할 계획입니다.
-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착되는 인식표는 수목생육을 고려하여 부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.
 - 수간 부피 생장을 고려하여 못을 박아 관리번호를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**용수철 등을 이용한 관리번호 표찰을 부착**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통합자료실>2015년도 도시숲경관 사업계획

가로수 관리방법 개선

- 추진배경 : 수목 및 경관 훼손 방지를 위한 가로수 관리방법 개선
- 주요내용
 - 가로수 수형조절 및 수종교체로 신호등, 교통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시계 확보
 - 용수철 등 수간 부피 생장을 고려하여 관리번호 표찰 부착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국유림 대부(사용)료 부담 완화

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☎ 042-481-4098)

■ 국유림 이용자(수대부자)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유림 대부료 부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.

-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, 지가의 상승에 따라 대부료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.

-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있는 대부료 연간 증가율을 「국유재산법」과 동일하게 5%로 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유림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.

- 대부료 연간 증가율 : (당초) 9% → (변경) 5%

- 또한,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료 부과 요율을 20/1,000에서 10/1,000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소관법령>입법 및 행정예고>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

국유림 대부(사용)료 부담 완화

■ 추진배경 : 국유림 사용자의 대부(사용)료 부담 완화

■ 주요내용

- 국유림 대부료 연간 증가율 하향 조정 및 감면 폭 확대
 - 연간증가율 : (당초) 9% → (변경) 5%
 -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용 대부지 대부료 요율 하향 조정 (20/1,000 → 10/1,000)

■ 시행일 : 2015년 상반기(잠정)



공 · 사유림 교환제도 개선

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☎ 042-481-4095)

■ 국 · 사유림 교환 기준과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할 예정입니다.

- 당초 지방청에만 설치하였던 “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”를 산림청 소속 1차 기관에 추가 설치하고, 교환조건 등을 강화하여 국유림 교환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자문을 받음으로써 교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

-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자문대상 면적 범위 확대
- 토지가격 감정평가 신뢰성 확보
- 산림경영임지 심사 강화 등 교환 승인 검토 강화
- 교환 처분면적을 제한하여 국유림 확대에 기여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 · 정책>법령정보>소관법령>입법 및 행정예고>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

국 · 공유림 교환제도 개선

■ 추진배경 : 국 · 공유림 교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

■ 주요내용

-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1차 전 소속기관으로 확대 설치
-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자문대상 면적 범위 확대
- 교환승인 요청 강화로 2회에 걸친 교환 승인 검토
- 교환조건 강화로 면적 제한 규정 설치

■ 시행일 : 2015년 상반기(잠정)



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(☎ 042-481-4211)

■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- 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 시설에 트리하우스,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추가하여, 휴양림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- 추가시설 : 트리하우스, 모노레일, 로프체험시설, 산악자전거시설·행/폐러글라이딩 시설, 방송시설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소관법령>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

■ 추진배경 : 국민들의 다양한 산림휴양 체험활동을 위한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

■ 주요내용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을 통해 자연휴양림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에 다음 시설물을 추가
 - 숙박시설 : 트리하우스
 - 편익시설 : 모노레일
 - 체험시설 : 로프체험시설
 - 체육시설 : 산악자전거시설·행/폐러글라이딩 시설
 - 안전시설 : 방송시설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 4일



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(☎ 042-481-4211)

-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객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.
-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**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마련**하였습니다.
 - 또한 이용객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해 보험적용 시설 및 보험금 최저한도액 등 보험가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훈령·예규·고시>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

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

- 추진배경 : 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
- 주요내용
 - 「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」 제정으로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보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
- 시행일 : 2014년 12월 15일

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(☎ 042-481-4124)

- 대도시 및 도서지역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완화 하였습니다.
- 도시와 도서지역의 산림 면적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서지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 - 기존 소유구분에 따라 30~50만㎡로 규정하던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특·광역시와 도서 지역에 완화된 세부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치유의 숲 조성 가능

구분	국가 및 지자체	그 외
일반지역	50만㎡ 이상	30만㎡ 이상
특별시, 광역시 지역	25만㎡ 이상	15만㎡ 이상
도서(섬) 지역	-	10만㎡ 이상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소관법령>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

- 추진배경 : 대면적의 산림 확보가 어려운 도시지역의 치유의 숲 조성 활성화
- 주요내용
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개정을 통해 특별시·광역시 지역과 도서지역의 치유의 숲 조성 면적 기준을 완화

- 치유의 숲 면적기준 완화 -

구분		현행	개선
특·광역시	국·공립	50만㎡	25만㎡
	사립	30만㎡	15만㎡
도서지역(섬)		신설	10만㎡

- 시행일 : 2014년 12월 4일

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(☎ 042-481-4124)

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**지정해제 기준**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다음과 같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을 신설하여 양성기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소관법령>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

■ 추진배경 :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양성기관 지정해제 기준 신설

■ 주요내용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
 - * 거짓이나 수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
 - *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 - *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
 - *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 - *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
 - *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 4일



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(☎ 042-481-4124)

■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**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 가능 범위를 확대**하였습니다.

- 기존 치유의 숲에 한정되었던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가능영역을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, 숲길 등으로 확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림치유 수요에 대응하고 향후 양성되는 산림치유지도사의 고용 및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소관법령>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
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

■ 추진배경 :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활동범위 확대

■ 주요내용

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개정을 통해 기존 치유의 숲으로 한정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 영역을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, 숲길 등으로 확대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 4일



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(☎ 042-481-4124)

■ 산림치유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**산림치유지도사 자격 기준을 완화**하였습니다.
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사, 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으로 인정함으로써 비전공자 출신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[산림청 홈페이지](#) > 행정·정책 > 법령정보 > 소관법령 >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

■ 추진배경 : 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

■ 주요내용

- 「산림치유 지도사 등급별 자격 기준 완화」
 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자격증 중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술사, 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 취득 가능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 4일



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

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☎ 042-481-4191)

- 임업인이 영림업 및 별목업에 종사하기 위해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-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 또는 직접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습니다.
- 앞으로는 농어업용 기자재뿐만 아니라 영림업 또는 별목업을 위해 구입한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의2

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7조

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

- 추진배경 : 농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환급을 임업용 기자재에도 적용하기 위함
- 주요내용
 - ① 영림업 또는 별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 또는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
- 시행일 : 2015년 상반기(잠정)
 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법률안이 2014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,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음

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

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☎ 042-481-4191, 4195)

■ 임가소득 안정 및 효율적 산림경영·관리를 위하여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.

- 당초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로 1인 1회 지원에 한정되었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를 확대하고, 지원내역에 생산 운반시설장비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여 임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산림경영·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

- (지원횟수 폐지) 1인 1회 1억원 이내 → 1인 1억원 이내

- (지원내역) 생산 운반시설장비(모노레일), 체험시설 추가

-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여 임가소득 안정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통합자료실>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

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 완화

■ 추진배경 :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여 임가소득 안정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

■ 주요내용

- 지원자격 및 요건 :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 이내 → 개인별 사업비 총액 1억원이내에서 1인 2회 이상 지원 가능
- 지원내역 : 임도·작업로 시설, 목재생산 장비, 목재가공시설, 유통시설, 재배시설, 관정 및 용수저장시설, 관리시설, 임업생산 기계·장비 → [추가] 생산 운반시설장비(모노레일), 체험시설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

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☎ 042-481-4208~9)

■ 원목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고자목 구입비용도 국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.

- 당초 표고자목 구입비용은 지역별 가격 편차 및 지원 기준이 없어 정산 등이 어려운 관계로 지원에서 제외되어 왔으나, 원목표고 재배자들에게 표고자목 구입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표고산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.

- (사업) 산림작물생산단지, 산림복합경영단지
- (대상) 임업인, 생산자단체
- (비율) 소액사업 : 국비(20%), 지방비(20%), 융자(20%), 자부담(40%)
공모사업 : 사업비 중 종자·종묘구입비(30% 이내)에 포함하여 지원
- (금액 및 본수) 본당 금액 : 3,760원(W 10cm × L 120cm)
면적당 본수 : 1,000본/330m²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통합자료실>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

원목 표고자목 구입비용 지원

■ 추진배경 : 원목표고 재배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표고산업 활성화

■ 주요내용

- 원목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목구입비 지원
(당초)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(변경) '15.1.1부터 원목 표고자목 구입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

임산물 생산·유통시설 지원 확대

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☎ 042-481-4206~9, 4194, 4196)

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**임산물의 생산·유통 시설 지원을 확대**할 예정입니다.

-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사업,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및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범위, 대상품목 확대 및 규모를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전문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통합자료실>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

임산물 생산 · 유통시설 지원 확대

■ 추진배경 :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체계 구축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

■ 주요내용

-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: 냉동탑차 지원 → 냉동탑차 및 일반 화물차량 지원, 파렛트, 운반용 상자 등 유통장비 추가 지원
-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: 수실류, 관상수 등 생산기반 조성 →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
-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사업 : 임촉법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단지로써 단지 규모가 25,000㎡ 이상 → 제7조제1항 별표1의 임산물 중 1개 단지 규모가 25,000㎡ 미만이라도 소득창출 경영목표 달성이 가능한 품목은 자체 판단하여 사업 지원 가능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

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

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☎ 042-481-4194, 4196)

-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·자연순환 임업의 정착과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를 위해 **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의 보조율을 조정**할 예정입니다.
- 기존 토양개량에만 한정되었던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고품질의 안전한 임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 비료도 지원 가능하도록 추가하고,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조경수 관정시설을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변경·편성하여 가뭄피해 방지 및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통합자료실>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

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및 조경수 관정시설 보조율 조정

- 추진배경 :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임업의 정착 및 임가의 안정적 생산체계 유지 도모

■ 주요내용

구분	당초	변경
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	(토양개량)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	(토양개량) 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 (유기질비료) 국고+지방비 80%이내, 자부담 20%이상
조경수 관정시설	국고 40%, 자부담 60%	국고20%, 지방비 20%, 용자 20%, 자부담 40%
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정원 정책 신설

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☎ 042-481-4249)

■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여 정원정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

- 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「수목원·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여 정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원정책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.
 -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·운영, 정원산업지원센터 설립,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

☞ (참고) 국회 홈페이지의안정보>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

정원 정책 신설

- 추진배경 :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위해 정원 정책 신설
- 주요내용
 -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·운영하고 정원산업지원센터 설치
 - ‘코리아가든쇼’ 개최 및 ‘꽃과 나무 상담소’ 운영
- 시행일 : 2015년 6월(잠정, 법률개정 중)



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

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☎ 042-481-4247)

■ 산불, 산사태 및 병해충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**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**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사방시설 등 재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 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선행되어야 했으나,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제절차 없이도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

- 송전탑 긴급복구 행위 허용
- 사방시설,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 허용
-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허용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최근 제·개정 법률>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

■ 추진배경 :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관리 및 예방효과 제고

■ 주요내용

- 숲길 조성 허용
- 송전탑 긴급복구 행위 허용
- 사방시설,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 허용
-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허용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 4일



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

산림청 산사태방지과 (☎ 042-481-8844)

■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
-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선발 시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은 자를 선발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육 미 이수자도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된 후 교육을 받도록 선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최근 제·개정 법률>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산사태현장예방단 선발기준 완화

■ 추진배경 : 산사태현장예방단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기준을 완화

■ 주요내용

-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산사태현장예방단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완화하되, 선발된 후 교육 이수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 4일



산림병해충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

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☎ 042-481-4269)

■ 산림병해충 방제품질 향상 및 산림기술 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.

- 산림병해충 방제면적 100ha 이상의 사업은 기술특급에만 부여되어, 사업량 확대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으로 방제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품질 향상과 산림기술 인력의 고용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.

- 기술 1급 : (기존) 100ha 미만 → (개선) 300ha 이하

- 기술 2급 : (기존) 100ha 미만 → (개선) 200ha 이하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입법 및 행정예고>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

■ 추진배경 : 산림병해충 사업량 확대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방제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

■ 주요내용

-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 및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
 - 기술 1급 : (기존) 100ha 미만 → (개선) 300ha 이하(실무경력 6년 이상)
 - 기술 2급 : (기존) 100ha 미만 → (개선) 200ha 이하(실무경력 3년 이상)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(법제처 심사 중)



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

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☎ 042-481-4269)

■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.

-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한 발급된 생산확인표의 유효기간을 45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.

-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: (기존) 30일 → (개선) 45일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법령정보>입법 및 행정예고>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

■ 추진배경 : 국민불편 해소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

■ 주요내용

-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유효기간 연장
 - (기존) 30일 → (개선) 45일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(법제처 심사 중)



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 확대

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☎ 042-481-4076)

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에 대량 훈증 시설을 설치하여 피해고사목의 임목자원 활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

-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는 벌채·훈증하여 산림 내 방치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피복제를 수거하고 화목 등으로 이용하였으나, 지난해부터 최대한 수집·파쇄하여 열병합발전소 및 펄릿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.
-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역에 대량 훈증시설 설치(3개소)를 지원하며, 피해고사목을 훈증·건조한 후 제재목 등으로 활용을 확대하여 임목자원 가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통합자료실>2015년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계획

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활용 확대

■ 추진배경 :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확대에 따른 피해고사목 활용가치 제고

■ 주요내용

-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훈증·건조하여 제재목으로 활용
 - 피해극심지역에 대량 훈증 시설 및 장비 지원(3개소, 42억원)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



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지원기준 강화

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 (☎ 042-481-8815)

■ 지난 '05년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인해 침체될 수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'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'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사업부지가 없어도 공동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, 2015년 1월부터는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 공동명의로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* 단, 이동가능 기계설비, 디자인개발 등 토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같이 사업신청자 공동 명의로의 사업부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(참고) 산림청 홈페이지>행정·정책>통합자료실>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

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공동사업 기준 강화

- 추진배경 : 공동사업 시설에 대한 분쟁발생 및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동 보조사업 관리 강화
- 주요내용
 -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동사업 지원에 한하여 신청자 공동 명의로의 사업부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(사업우선순위에 추가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항만과 경제자유구역의 이중규제 개선

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(☎ 044-200-5751)

- 항만공사(PA)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,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한 실시계획도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될 예정입니다.
- 지금까지 양 법령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실시계획을 각각 승인받았으나, 2015년부터는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단축되어 행정불편이 해소되고, 항만시설의 신속한 개발이 예상됩니다.

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법령바다>법령>「항만공사법」 참조

항만과 경제자유구역 이중규제 개선

- 추진배경 : 항만과 경제자유구역 내 이중규제를 개선하여 항만시설의 신속한 개발 추진
- 주요내용
 - ① 항만공사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정한 실시계획 승인 의제
- 시행일 : 2015년 3월(잠정, 개정안 국회심의중)*
 - ※ 입법 진행중(2014.12월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)



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(1%→0.5%)

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(☎ 044-200-5248)

-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먹는 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%에서 0.5%로 인하합니다.
- 요율인하를 통해 산업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해양심층수 업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* 하여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.

* 요율 인하시 이용부담금 부과액(업계전체) : 100백만원→50백만원('13년 기준)

☞ (참고)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

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인하

- 추진배경 : 부담금 요율 인하를 통해 심층수 업계 부담 완화 및 업계 경쟁력 강화
- 주요내용
 - 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인하(1%→0.5%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

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(☎ 044-200-5448)

■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.

- 지금까지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어 왔으나, 2015년 1월 부터 염장수산물에 사용된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.
 - 2014년 6월 30일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」(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-75호)에 따라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였으며, 6개월이 경과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금번 제도개선은 식용 소금의 원산지 둔갑, 염장수산물과 식염의 원산지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,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.

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식염의 원산지표시 강화

2015년도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

■ 추진배경 : 식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정보제공 확대

■ 주요내용

①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

* 현행(염장미역(미역 : 국산)) → 변경(염장미역(미역 : 국산, 천일염 : 중국산))

■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

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(☎ 044-200-5517)

- 어선원 복지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어선 제한톤수를 상향 조정합니다.
- 지금까지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선의 상한톤수를 8~10톤 미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, 연안어선의 상한톤수 제한을 10톤으로 상향조정하여 어선원의 휴식공간 등 어선원의 복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- 아울러 어획능력을 높이지 않도록 선박톤수 증가는 어선대체를 통해서만 허용하고 불법 건조·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감독관이 상시 점검하는 체제가 갖추어집니다.

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개바다>보도자료>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

연안어선의 선복량 한계 상향조정

- 추진배경 : 연근해 어선의 제한 톤수 상향 조정을 통한 어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
- 주요내용
 - ① 연안어선 선복량 제한 상향(8톤 미만 또는 10톤 미만 → 10톤 미만)
- 시행일 : 2015년 3월



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

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(☎ 044-200-5563)

- 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**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2015년 3월부터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** 올릴 예정입니다.
- 이번 과징금 한도액의 조정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.
 - 지난 2007년 개정된 **현행 과징금 한도액은 너무 낮아**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어도 **과징금만 납부하면 다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**이 팽배해 과징금 대체비율이 지난해 70%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습니다.
 - 특히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업의 경우 지난해 과징금 대체율이 92% 달하는 등 불법어업 제재수단으로써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.

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개바다>보도자료>어선 제한톤수 늘고 과징금 크게 올라

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으로 상향조정

- 추진배경 : 과징금 한도액 현실화를 통한 행정처분으로서 실효성 확보
- 주요내용
 - ① 어업제한,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(2천만원 이하 → 1억원 이하)
- 시행일 : 2015년 3월

■ 수산자원보호와 농어가 소득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!

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(☎ 044-200-5531)

- 어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합니다.
-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일반 음식점 및 자동차 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고, 선박의 길이가 40미터 미만(당초는 24m 미만)인 선박의 건조·수리를 위한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의 건축도 허용합니다. 다만, 일반 음식점 및 자동차 야영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허용합니다.
- 진료시설, 도서관, 관광·조경시설, 레저용 기반시설 등 어항편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, 횃집이나 휴게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를 하는 경우에 허용합니다.
- 창고시설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농업용·수산업용 외에 선박시설과 선박용 창고시설까지 확대하고, 500톤 이하, 500㎡이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도 농어업·수산업과 선박시설, 선박용 물건까지 허용할 예정입니다.

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법령바다 > 법령 >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

2015년도 수산자원보호구역 허용행위 확대

- 추진배경 :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설치가능한 시설 추가 허용(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서 일반음식점, 자동차야영장, 어항편익시설)
 - ② 수리·건조할 수 있는 적용대상 선박 확대(24m 미만→40m 미만 선박)
 - ③ 창고시설 건축대상 확대(농업용 및 수산업용→농업용, 수산업용과 선박용)
 - ④ 물건 쌓아 놓는 대상 행위 확대(수산업→수산업, 농어업, 선박시설과 선박용 물건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시행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(☎ 044-200-5465)

■ 2015년 4월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제도의 법적근거가 시행되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
-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수령한 자는 지급액의 2배를 환수하며,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허위로 수산물 판매실적이나 어업종사실적을 확인해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* 「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14. 4. 16.)

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새소식>보도자료>수산직불금 부정수급못한다

조건불리수산직불제 제도 개선

■ 추진배경 :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부당수급 방지

■ 주요내용

- ①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(지급액의 2배 환수,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
■ 시행일 : 2015년 4월



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

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(☎ 044-200-5429)

- 2015년 1월부터 수산업협동조합(지구별, 업종별, 수산물가공)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하여 조합의 설립이 쉬워집니다.
 - 지금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 시 지구별수협은 100억원 이상, 업종별 및 수산물가공수협은 80억원 이상의 사업규모를 갖추도록 하고 있었으나, 일선수협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일선수협의 상임이사 자격기준요건이 완화되어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의 영입이 쉬워져 조합의 경영 활성화가 예상됩니다.
 - 지금까지 일선수협의 상임이사는 수협·은행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에 국한되었으나 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 이상 종사경력자 등으로 확대 됩니다.

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> 법령바다 > 법령 >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

2015년도 수협관련 규제완화 추진

- 추진배경 : 조합설립 기준 및 상임이사 자격완화로 우수인력 진입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일선수협 설립 조건 중 사업규모 기준 폐지(80~100억원 이상 → 폐지)
 - ② 일선수협 상임이사 자격기준 완화(수협·은행 10년 이상 종사경력자 → 관련 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10년이상 종사경력자)
- 시행일 : 2014년 12월(잠정,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.16)

■ 배타적경제수역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시범실시

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(☎ 061-240-7970)

■ 한·중 양국은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(EEZ)내 입·출역하는 어획물운반선이 지정된 체크포인트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.

- 어획물운반선의 체크포인트 통과를 의무화함으로써 상대국어선의 불법어획물 운반 행위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어 불법조업 사전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- 2014년 12월부터 시범으로 실시하고, 2015년 제15차 한·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평가한 후 2016년에 정식 시행될 계획입니다.

- 또한 한·중 어업협정 수역 조업어선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일부 입어 어선을 모범선박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
☞ (참고)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소식바다>보도자료>한-중 서해 잠정조치수역 연내 공동감시 실시

2015년도 한·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

■ 추진배경 : 한·중 양국은 어업협정수역에서의 해상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상호협력 강화

■ 주요내용

- ① 입어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 시범 실시(2014년 12월), 모범선박 지정제도 도입(2015년 1월)

■ 시행일 : 2014년 12월



선박운항의 필수품, 해도 판매가격 인상

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도수로과 (☎ 051-400-4312)

- 바다를 항해할 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**해도(海圖)**와 **수로서지의(水路書誌, 항해서지)** **가격을 인상**할 예정입니다.
 - 해도 및 전자해도, 수로서지는 2011년 이래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해 왔으나, 생산 원가 상승에 따라 **2015년부터 판매가격을 11% 가량 인상**하게 되었습니다.
 -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현재 **종이해도 369종, 전자해도 692셀과 조석표·천측력 등 14종의 수로서지**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.
 - 해도 및 전자해도, 수로서지는 선박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바다 안내 자료입니다. **항해사는 출항 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**
- ☞ (참고)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>정보마당>해양조사관련 법률정보>고시>수로도서지 판매가격·대행수수료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한 규정(별표)

2015년부터 수로도서지 판매가격 인상

- 추진배경 : 매 2년마다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의 적정성 판단 후 판매가격 조정
- 주요내용
 - ① 수로도서지 판매가격을 11% 인상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

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기획총괄과 (☎ 051-309-1721)

■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**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(공공기관)으로 새롭게 출범**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 **정부 임시조직***으로 운영되었으나, 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이 시행되는 **2015년 4월 중순 이후 법인으로 출범**하게 됩니다.

* 「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(대통령훈령 제321호, '13.10.8.)」

☞ (참고)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> 법령 > 현행법령 > 국립해양박물관법[시행 2015.4.16.]
[법률 제12818호, 2014.10.15. 제정]

국립해양박물관의 법인 출범

■ 추진배경 : 「국립해양박물관법」 제정에 따른 법인 출범

■ 주요내용

① 운영조직 변경(정부 임시조직→국립해양박물관 법인)

■ 시행일 : 2015년 4월